

## 민주 광역·기초의원 당원경선만으로 또 국회의원앞 줄세우기

### 20년 폐습 되풀이... 자치 퇴색

민주당 지방(광역·기초)의원 후보 선정이 소규모의 당원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 풀뿌리 지방자치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역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사실상 후보를 낙점할 수 있어서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6·2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당원 경선으로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지역위원회 당원 3% 이상으로 당비 우대 당원 50% 이하, 후보자 추천 당원 20%, 일반 당원 30% 등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심위는 이를 토대로 조만간 선거인단 참여 당원 숫자와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광주지역 각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우대당원이 200명 안팎에 그쳐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할 당원 선거인단 규모가 400~600여 명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이 같은 소규모 선거인단은 당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의 경선 개입 여지를 확대하면서 '줄 세우기'를 조장,

광주·전남 지방의회의 민주당 독주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돈 선거'를 부추겨 후유증도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광역의원 예비후보는 "단체장 경선에는 비 당원도 참여해 시민의사를 잘 반영하는데, 지방자치의 또 다른 근간인 지방의원은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이 입맛대로 정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20년간 줄을 썼으면 됐지 또 서라는 말이나"고 반발했다. 현재로서는 지방의원 경선에 지역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위원장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어 입지자들이 줄 세우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지방의원들이 주민들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등의 말만 듣게 돼 풀뿌리 자치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지역 국회의원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광주시의원들이 지난달 18일 군소 정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찰력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를 밀어붙이기도 했다. 광주시의원들이 소신보다는 '공천권'을 쥔 지역위원장 및 중앙당의 눈치를 보며 다양한 정치적 세력의 지방의회 진출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것이다. 이 같은 우려가 확산하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원 선거인단 규모를

800~1천5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시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경선방법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남구의 경우 국민참여경선으로 시의원과 구의원 후보를 뽑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지방의원 경선에 참여할 당원 숫자 등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원 경선이라도 가능한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 전남지사 경선 4월 17일로

### 민주 이랬다 저랬다... 광주시장 경선방식은 오늘 결정

전남지사 경선이 4월 17일로 최종 결정됐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이 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밤늦게까지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 기사 3·4·5면> 이날 최고위원회는 대전·광주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시민배심원 50% + 당원 전수조사 50%'로 시장 후보를 공천하자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박주선 최고위원이 광역단체장 공천에 시민배심원제를 적용하는 규정이 당헌·당규에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일부 최고위원은 '당원 전수조사 40% + 시민 여론조사 30% + 시민배심원제 30%'의 혼합 경선안

을 제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8일에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도 합의되지 않으면 최고위원 투표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당초 공심위가 이날 28일로 잠정 결정했던 전남지사 후보 경선일을 다음달 17일로 연기했다.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

해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신론과 방송 등을 통한 '토론회'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되, '국민여론조사 50% + 당원선거인단 투표 50%(우대당원 50% + 일반당원 50%)'로 하는 안과 '국민여론조사 50% + 당원여론조사 50%'로 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주선 최고위원 등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앙당 공심위의 권고 등에 따라 시민 참여를 반영하는 조정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르면 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변호사 재개업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재개업인사  
입력: 2010. 3. 5 (금)  
입력번호: 광주광역시 법원 2010-3-10-1  
호통당일 1층 100호  
대표전화: (062) 222-41700 팩스: 222-41705



봄비가 내린 7일 광주·전남 곳곳에 찬란한 봄의 향기가 퍼졌다. 사진 왼쪽부터 광주시 북구 용봉동 중의공원에 핀 흥매화를 즐기는 여성들, 구례 산수유 마을로 봄마중 나온 아이들, 영암군 덕진면 보리밭에서 거름을 주는 농부. /최한배·김진수기자 choi@kwangju.co.kr

##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찬반투표

위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가 자구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채권단은 광주공장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관련 기사 8면> 금호타이어 노사와 채권단에 따르면 노조는 8일과 9일 광주공장과 곡성·평택 공장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는 9일 밤 늦게 집계된다. 노조는 지난 2일 제10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10% 삭감, 상여금 100% 반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신

들의 협상안이 거부당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내는 등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노조는 현재 밤샘 주공장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이어온 파업이 5년 연속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실사를 벌이고 있는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광주공장 존폐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할 방침이어서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도 예고되고 있다. 안양수 산업은행 금호 경영지원단은 7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실사

는 마무리 단계로 계속조정만 남겨놓고 있다"며 "주말에 나올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공장별로 존재가치를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 단장은 "광주공장은 이대로 가도 되는 회사와 공인회계사, 채권단이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천연고무 등 원재료 수급난에 따라 오는 20일경부터 공장 전면 가동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채권단은 하지만,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 없이는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